

韓, 亞 최초 ‘유엔해양총회’ 개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뉴욕총회 참석
결의안 설명 등 각국 지지 이끌어
“韓 해양기술·정책 세계에 알릴 것”

한국이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된 '제4차 UN(유엔·국제연합)해양총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유엔해양총회 개최국이 됐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9일(미동부시간) 미국 뉴욕 소재 국제연합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됐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 기권 0표로 채택됐다.

이 총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다.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1만5000여 명이 모여 해양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주목할 대목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불과 2년 앞둔 시점에 열린다는 것. 이에 2030년 이후 새로운 해양협력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엔해양총회는 그동안 포용적이고 균형있는 해양협력 논의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개최해 왔다. 4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결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총회 개최지로 한국과 칠레가 뽑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칠레와 공동 개최를 합의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진행해 왔다.

사전 고위급 행사가 2027년 칠레에서, 본회의가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UN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유치가 최종 결정된 이번 뉴욕 총회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참석했다. 전 장관은 결의안을 설명하는 등 막판까지 각국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냈다.

해수부는 유엔해양총회가 유엔의 공식 국제회의인 만큼, 세부 의제와 총회의 구성은 앞으로 개최국인 우리나라와 칠레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총회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기술, 산업,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최고위급 외교의 무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 장관은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쌓아온 책임 있는 기여와 높은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며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해양분야 국제논의를 지속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산업부, 한·미 비관세분야 협상 역량 집중

車·농산물 등 현안별 대응책 강구

정부가 이달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농산물·디지털·자동차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관보 게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후속 비관세 협상이 향후 통상환경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 상황 ▲EU·멕시코·캐나다의 통상조치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 간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긴 농산물 검역, 자동차, 디지털 무역 등 민감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측이 농축산물 통관 절차,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부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모듈형 신 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부처 협의를 통해 현안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마무리되었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개막

농림축산식품부 최신 R&D 성과 소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을 개최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최신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미래농업,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10일 개막했다. AI농업혁신, 대체식품, 리버스에이징, 디지털육종, 극한환경농업, 애니멀 웰케어 등 6개 분야에서 11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연구개발 성과와 혁신 기술·제품을 전시한다.

글로벌·혁신존에는 2026년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 혁신상을 수상한 선도기업들이 참여해 그 성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수직농장 기술개발 동향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미래성장포

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진출과 상용화 컨설팅 등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기조강연은 바둑에서 ‘알파고’를 상대로 유일하게 1승을 거둔 이세돌 울산과학기원(UNIST) 객원교수가 맡았다.

개막식에서는 ‘제28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 산업포장은 에너지절감형 고효율 광원 요소기술을 개발한 ㈜셀파스 페이스 윤좌문 대표와 수용성·무독성 산불지연제를 개발한 대명하이테크㈜ 박종민 대표가 차지했다.

박정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과학기술대전이 첨단 과학기술을 우리 농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답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후부, 범정부 해상풍력보급가속 TF 2차 회의

2035년까지 해상풍력 25GW 이상 보급

연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발족
미래에너지펀드 등 금융 지원 검토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의 저해 요소로 꼽혀 온 기반시설 부족, 금융조달 난항 등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25GW(기가와트) 이상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전담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후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인프라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사실상 목포신항 1곳뿐이다. 정부는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설치선박(WTIV)도 민간·공공 투자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제2차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메가와트)급 4척 이상의 확보를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 및 금융권 공동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보증·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초기 사업 안정성도 확보한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 인허가인 군 작전성 협의도 정비한다.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군 작전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내년 경쟁 입찰은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진행한 이후 추진한다.

또 내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한다. 이를

토대로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획입지를 통해 평균 10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6.5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계약기간 연장, 물가 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해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을 해소한다.

이 밖에 정부는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연내 발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준·착공 물량 기준 누적 10.5GW 확보,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보급에 속도가 붙을 경우 해상풍력 발전단가 역시 kWh(킬로와트시)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로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김성한 기후부 장관은 “항만·선박·금융·인허가 지원 등 전 주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가면서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본보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